2003년 건설업 10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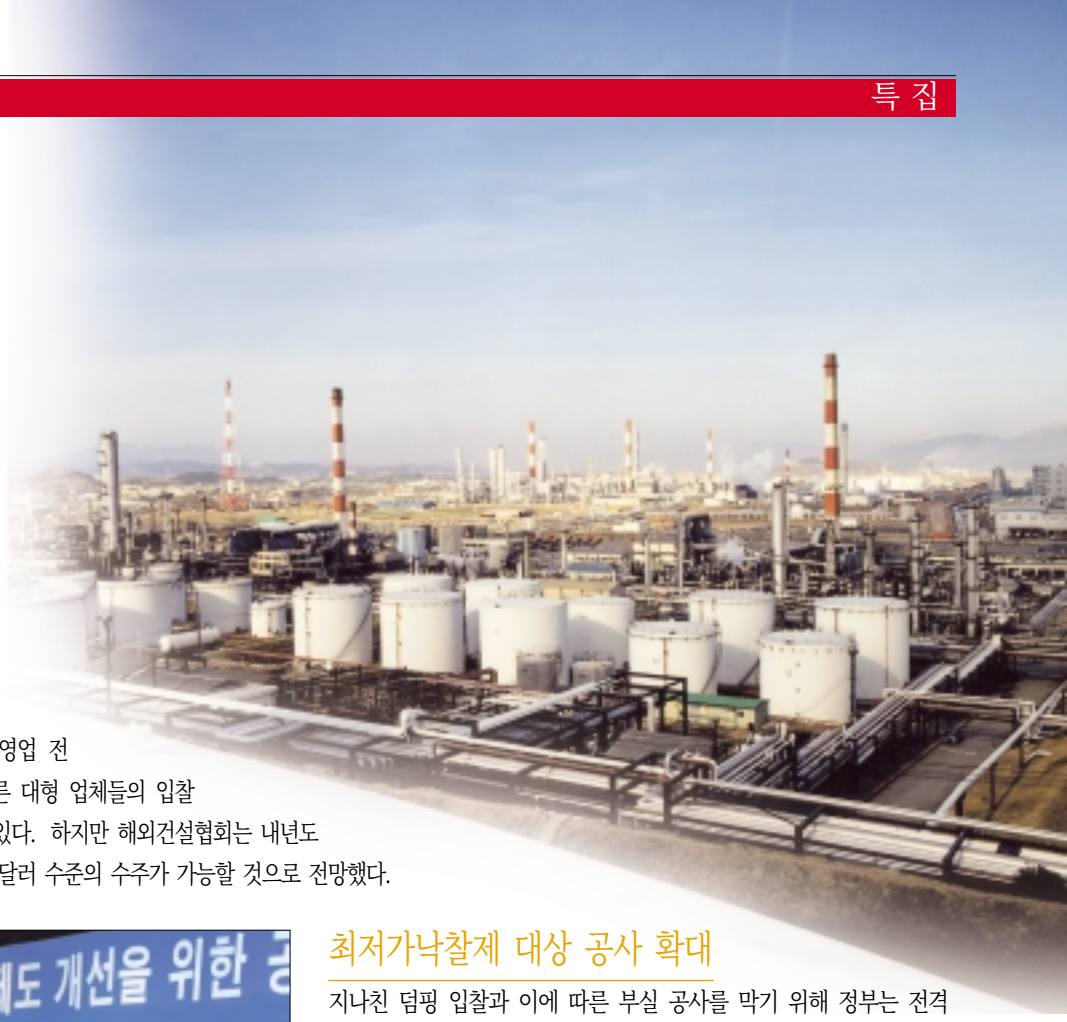
건설과 환경 충돌…국책 사업 표류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발과 환경 논리가 충돌하고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 등으로 국책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수조원이 투입되어 여러 해 진행된 공사가 중단 위기에 놓이고 일부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 경인운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 터널, 북한산 통과 사패산 터널, 위도 핵폐기장…. 이들 사업들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환경 측면의 주장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업계가 최적의 생산 기반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 건설산업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월 14일 공청회를 가졌다. 주요 내용은 △직접시공제 도입 △겸업·영업 범위 제한 개선 △하도급제도의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개선 △건설업등록반납제도 도입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이양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건설저널」이 선정한 "2003년 건설업 10大 뉴스"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유관 단체의 임직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진, 그리고 각 언론의 건설 담당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임.



해외건설 수주 부진 심화

올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40 억 달러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의 61 억 2,600 만 달러의 7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최악의 수주 실적을 보였던 1998 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수주 부진은 세계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발주 물량 격감과 사스 여파로 아시아 지역 수주 활동의 급격한 위축, 이라크 전쟁 발발에 따른 중동 지역 발주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건설업계의 보수적인 해외 영업 전략,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등에 따른 대형 업체들의 입찰 참여 빈도 감소도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협회는 내년도에는 올 실적을 상회하는 70 억 80 억 달러 수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격적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0 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서 500 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 기준은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 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 입찰자의 평균보다 20 % 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2005 년에는 100 억원 이상, 그리고 2006 년에는 모든 공사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 본격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촉발된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올해 들어 관련 조직이 정비되고, 이전 비용이 제시되는 등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재고를 촉구하는 모임이 결성되고, 국회에서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신행정수도는 입지와 도시 규모 및 형태 등의 큰 밑그림이 1차적으로 도출된 상태이다. 이 시안은 지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정부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최종 입지가 결정되고 사업 시행자도 지정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2030 년까지 총 45 조 6,000 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추방, 현장 인력 대란 예고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실시되면서 그 동안 건설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른 시간 내에 대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건설 성수기가 도래하는 내년 3월에는 건설 기능 인력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일각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족한 인력을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출국시키기보다는 일정 정도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원할 경우 합법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주5일 근무제 시대 개막

주5일 근무제가 건설산업에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은 공사비 상승과 공기 연장이다. 그러나, 발주자의 공사 원가 산정 체계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생산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장애 요인들과 휴일 증가에 따른 작업의 불연속성으로 인해 저하될 수 있으며, 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 사고의 증가와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건설산업이 3D산업의 하나로 인식되는 현 실정에서 다른 산업과 비교된 상대적인 열등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 조치에 따른 기능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청계천 복원 공사 대장정에 올라

오랫동안 삭막한 콘크리트 고가 도로와 복개 구조물 속에 갇혀 있던 서울 청계천을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되살리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7월 1일 드디어 역사적인 대장정에 올랐다. 7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청계고가도로는 첫 개통된 지 34년 만에 전면 폐쇄되었으며, 청계천로 등도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되거나 교통 체계가 재조정되었다. 태평로입구에서 신답철교까지 5.8km 구간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는 청계천은 21세기 서울시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서 거대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풍 '매미', 지난해 '루사'에 이어 한반도 강타

지난해의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는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할퀴고 갔다. 이로 인해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복구 사업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농경지 침수는 물론 도로, 철로, 교량 등 인프라 시설들이 유실되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태풍 복구비 3조원을 편성하였다. 재해는 막대한 물적 손해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귀중한 교훈을 준다. 지난 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도 수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기술적 자만 또는 지나친 경제성 추구에서 온 안전성의 부족, 자연의 큰 힘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소홀하게 대비할 경우 입게 될 피해 등을 알려주었고, 한편으로는 자연의 힘을 바로 알고 건실하게 대비하면 재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강남 불패 신화 무너지나

연초부터 신 행정수도의 유력한 후보지인 대전 지역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투기의 조짐은 전국의 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어 온 나라가 투기장이나 된 듯 들썩였다. 급기야 2·4 대전 지역 부동산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5·23, 9·5 등 여러 차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집값은 오히려 치솟기만 하였다. 갈 곳을 잃은 부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서울 지역의 집값은 1990년대 10년 동안의 상승률을 단 3년 만에 갈아치우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결국 정부는 10월 29일 부동산 공개념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CJ